

정신과 찾는 아이들 매년 증가

이용호 의원 “올해 20만명 전망... 2015년 이후 연도별 누계 총 91만9137명 18세가 가장 많고 3세가 가장 적어... 코로나 시대, 세심한 ‘마음방역’ 필요”

정신과를 찾는 미성년 아이들이 해마다 늘면서 올해는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2020년 8월 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13세~18세 미성년자는 연도별 누계로 총 91만

9,13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총 14만3,109명, 2016년 14만6,719명, 2017년 15만2,711명, 2018년 16만 6,307명, 2019년 18만 2,25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총 13만4,787명으로, 2015년 한해 동안의 인원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19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치료비로는 총 4,670억 6,200만원이 들었고 그중 71.4%인 3,336억 2,300만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출됐다. 진료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 비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5년 총 진료비 634억 2,000만원 중 68.6%인 435억 1,200만원이 건보 급여로 지급됐고 2016년 진료비 690억 1,400만원 중 471억 5,300만원 (68.3%), 2017년 734억 2,600만원 중 502억 5,000만원 (68.4%), 2018년 937억 1,600만원 중 679억 4,800만원(72.5%), 2019년 1,110억 6,800만원 중 826억 1,600만원 (74.4%), 2020년 8월까지 564억 1,800만원 중 421억 4,400만원 (74.7%)이 급여됐다. 대체로 ‘나이순’으로 진료자 수가 많았다.

만 18세가 전체 진료자의 11% (누적 10만1,133명)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17·16·15·14세가 각각 9.9%·8.9%·7.3%·6.5%로 차례로 뒤를 이었다.

진료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은 만3세(2.8%, 누적 2만6,075명)였고 그 뒤로 4·5·6세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2018년 7월 이후 정신치료 수가 개편, 본인부담 완화가 이뤄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정신과를 찾고 있다는 것은 어른들이 외면해선 안 될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특히 올해는 사회 전반에 ‘코로나 블루’가 퍼져있고 ‘돌봄 공백’도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특히 세심한 ‘마음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직접 제작한 ‘마스크 스트랩’ 도의회 환복위,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에 1000매 전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25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마스크 스트랩’을 대한노인회 전북도연합회(회장 김두봉)에 전달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마스크스트랩’을 대한노인회 전북도연합회에 전달했다. 사진은 마스크 스트랩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 환복위 위원들의 모습이다.

‘마스크 스트랩’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등 마스크를 잠깐 벗을 때 목에 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끈으로 마스크를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돼 마스크를 떨어뜨리거나 잠깐 벗은 사이 분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어르신들의 마스크 분실 방지를 위해 스트랩 1,000매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제작했다. /유호상 기자

“ICT 활용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 건립 공모 선정 환영”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 의원이 최근 전북도가 ICT를 활용한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 건립 공모사업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됐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도는 70억원의 사업비(국비35, 지방비35)로 고



품종 육성으로 도내 수산업 경쟁력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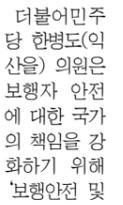
고 및 고창군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패류 종자 보전, 관리 및 전국 공급 거점화를 통해 패류 양식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양식 기술지원을 통한 어업인 육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 역시 예상된다. 한편 성 의원은 평소 고창군 패류 양식산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전북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공모사

업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성경찬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어업인들의 수익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창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수산기술연구소 전병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유호상 기자

강염병 의심되면 ‘1339’로

보행자 안전 국가 책임 강화

민주 한병도 의원 ‘보행안전·편의증진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 의원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정책 추진성과를 정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행현황과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가 부족해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우선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보행정책 추진체계와 시책의 종합적 실행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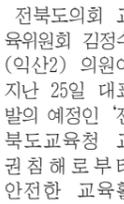
또한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 안전에 대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등 보행자 교통여건은 미흡한 상황이다”며 “보행자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김정수 도의원, 대표 발의 예정 조례안 입법 공청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수(익산) 의원이 지난 25일 대표 발의 예정인 ‘전북도교육청 교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위한 최종 단계로 마련됐다.

김정수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간담회뿐만 아니라 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김정수 의원은 “현재 광주를 비롯해 울산과 충남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교원들의 권리에 형평성을 맞추고, 이들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내 교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교권보호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송옥진 기청 교권조례현장교사추진단장은 “도내 교원들이 교육의 수준을 높여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북 교권 보호 조례가 무사히 제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가 국가 사무에 관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국가사무로 본 대법원 판결 등이 조례 통과 여부를 변수가 있어서다.

이에 송옥진 추진단장은 “교원이 국가공무원이라고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교육부의 생각은 맞지 않다”며 교권조례 제정을 적극 찬성 목소리를 냈다.

김정수 의원은 “선언적 수준을 벗어난 실효성 있는 조례가 통과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언제나 도민과 함께 전북개발공사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전라북도를 위해 전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